

2014. 3. Vol 227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직지심체요절

뒷 산이 우르릉 쿵
꽃이 피었다 지고
물이 들고 나길 몇 해인가
문혀 스러지다가
삼날에 문득 깨어나다
땅이 울리다
맨발로 뛰어나가 너를 맞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꿈틀거리는 글자
바로 네 가슴 직지심체요절
품에 붙안고 온 사람들

첫 눈 속을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마음 속 찰랑 거리는 피안의 기슭
매일 그 꿈 길을 간다
무심천 푸른 물 바다로 나가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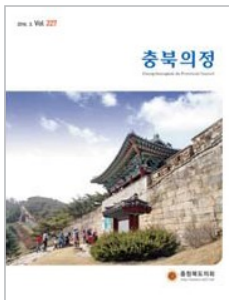


김선중

- 2004년 대한문학(시) 등단
- 건축사



Contents



청주 상당산성

삼국시대 백제 토성, 조선 숙종(1716)때 개축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원형이 잘 남아있는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 산성으로 사적 제212호로 관리되고 있다.

- 04 제326·327회 임시회
- 06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 2014년도 운영방향
- 08 건의문
 -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촉구 건의문
- 10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 1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공청회
- 12 상임위원회 활동
- 18 특별위원회 활동
- 20 주요 처리 의안
- 22 5분 자유발언
- 24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26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일반상식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 발 행 일 2014년 3월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F A X (043) 220-5119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전 화 (043) 220-5123



충북도의회는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326회 임시회

도민의 희망과 비전 심어주는 적극적 자세 주문

2014년도 집행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제9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충청북도의회는 ‘영충호 시대’ 실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면서 의회 차원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의회는 지역경제를 크게 위축시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노력과 함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 들어 첫 임시회(제326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하반기에 출범하는 10대 의회가 성숙한 의회문화의 기반 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견고한 징검다리를 놓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2014년도에는 영충호 시대를 여는데 힘을 합치고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과 함께 소통의 시대를 넘어 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1월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6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었다.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으며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영충호시대의 중심 도약을 위한 국민 모두의 융합과 화합을 이끌어갈 협의체 구성 등 8가지 주요 역점 시책을 제시했고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은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한 ‘배움이 즐거운 학교 실현’과 창조교육 추진을 위한 ‘꿈을 키우는 창의 인재육성’ 등 4가지 주요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재획정 〉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계	131	26	19	13	12	8
비례	17	3	2	2	2	1
지역	114	23	17	11	10	7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8	8	7	7	8	8	7
1	1	1	1	1	1	1
7	7	6	6	7	7	6

시·군의회 의원 정수 : 131명 (현행과 같음)

6.4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원 포인트 임시회’ 열어 관련 조례 의결

충청북도의회가 도내 시·군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131명으로 확정하고 6개 지역 선거구 8개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했다.

도의회는 2월 18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6.4 지방선거의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재획정을 의결했다.

도의원 지역구 변경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 조정은 청주시 ‘우암동’을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영동군 ‘학산면’을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증평군 ‘가’선거구를 2개로 분할하여 ‘가’와 ‘나’선거구로 늘렸으며 기존의 ‘나’선거구는 ‘다’선거구로 변경했다. 또 영동군 ‘용화면’은 ‘다’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변경했다. 다른 지역은 변동사항이 없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2일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읍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음성

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AI)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문 채택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 등 관련부처에 이송했다.〈관련내용 8면〉

이와함께 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 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도의회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도 개최했다.〈관련 내용 10면〉

도의회는 규탄대회에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계획을 즉각 취소하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AI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충청북도 2014년도 운영방향

‘영충호 시대의 중심 충북건설’에 방점

신수도권 시대 걸맞는 충북 위상 강화 추진

2014년도 충청북도 도정운영 방향의 큰 틀은 ‘충화영호(忠和嶺湖)’로 짜여졌다.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바탕으로 ‘영충호 시대 중심 충북’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영충호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분야별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부문별 정책 목표를 보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함께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의 세계적 위상 강화,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복지 체계 구축, 고품격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지역·계층·도농간 함께하는 충북 실현, 새로운 충북경제 신화 창조,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 건설 등이다. 충청북도는 ‘영충호 시대 중심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영충호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융합과 화합을 이끌어갈 협의체 구성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세계적 브랜드를 굳히기 위한 오송 첨산의료복합단지 본격적인 연구개발 착수,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완공,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

▲균형발전으로 ‘함께하는 충북’을 정착시키기 위한 충청내륙고속도로 및 영동~보은 간 도로 실시설계 추진,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기본설계

▲요람에서 무덤까지 충북형 평생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실현, 9988 행복 나눔미 확대 운영 및 9988 행복 지키미 사업 추진

▲고부가가치 친환경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유기농·무농약 재배면적 5배 이상 획기적으로 확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

▲충북 4% 경제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5조 5천억원 규모 투자 유치, 6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 160억달러 달성

▲도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을 실현하기 위한 콘텐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본격 조성, 문화예술인 회관 마련 및 국립현대미술관 수장·보존센터 건립

▲매력 있는 관광·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실시설계,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 사업 추진 등이다.



행복한 충북교육 위한 25개 과제 추진

즐거운 학습으로 창의와 슬기 키우는 교육

충북교육청은 2014년도 교육지표를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으로 삼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지향하는 학교모습은 즐거운 학습을 통해 창의와 슬기를 키우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으로 품으며 꿈을 키워주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로 행복한 학교 구현 등이다.

이를 위해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총 25개의 추진과제와 120개 세부사업 및 2개의 특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부문별 구체적인 추진시책은 다음과 같다.

▲조화로운 학력 신장의 추진목표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 실현'이며 추진과제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진학지도, 독서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원전문성 신장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대비 창조 교육의 추진목표는 '꿈을 키우는 창의 인재 육성'이며 추진과제는 창의·인성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진로교육, 정보교육 등이다.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스마트교육 등 20개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진취적인 품성 함양의 추진목표는 '건강하고 따뜻한 민주시민 육성'이며 추진과제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진로·상담교육, 정체성 확립 교육 등이다. 이를 위해 학생예술·체험활동 지

원을 비롯한 18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참여 행정의 추진목표는 '신뢰받는 지원행정 구현'이며 추진과제는 신뢰받는 충북교육, 교직원 복지, 교육재정, 인사행정 등이다. 교육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정부3.0 관련 사업 추진 등 43개 사업이 추진된다.

▲균형 있는 복지 구현의 추진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이며 추진과제는 교육환경 개선, 유아교육, 특수교육, 어울림교육 등이다. 세부 사업으로 어울림 세상을 여는 다문화교육 등의 22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색사업으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과 행복 4중주(SPTC)를 통한 인성교육이 역점사업으로 추진된다.



“AI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 해야”

도의회, 건의안 채택해 청와대 등에 이송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진천과 음성 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충청도의회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지역 오리와 닭 사육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살처분된 가금류의 보상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이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2003년 이후 2~3년을 주기로

AI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전액 국가에서 보상하던 살처분 비용도 2011년부터는 중앙정부가 80%, 나머지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예방적 살처분 비용과 방역비용 등을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축산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방역 초소 운영 및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도의회는 “AI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

그동안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11년 동안 AI 청정지역이었던 충북은 이번 AI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160만 충북도민 모두가 깊은 근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현재 진천은 36호 76만여 마리를, 음성은 6호 1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살처분 보상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예방적 살처분 비용까지 지방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차단방역 비용, 가금류 살처분 매몰 비용 등을 포함하면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AI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와 슬픔을 같이 하고, 이번 AI 사태의 조기종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하나, 축산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방역 초소 운영 및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우선 지원하라!

하나, AI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살처분 상금 전액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즉시 개정하라!

2014년 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건의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법률 개정 요구

충북도의회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특별 교부금 지원을 촉구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4일 제32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에 이송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촉구했다.

건의문에서 도의회는 “현행 관련 법률과 지침을 따를 경우 충북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6개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 된다”며 “이 지역들은 대부분 농·산촌으로 재정수입이 열악한 지역이고 현재도 교육 인프라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현실적인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없이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성토했고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서남수 교육부장관님!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줄이는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현재 재정이 열악한 82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이 적용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군 등 6개 지역에서 전년도 기준 74억 7천여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농·산촌지역으로 재정수입이 열악한 자치단체며, 현재도 교육 인프라

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도의회는 160만 충청도민의 열망을 담아 정부의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도의회, 결의대회 갖고 도발행위 중단 촉구



2월 18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가 거둬드는 일본 정부와 지도층의 독도 관련 망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18일 오후 3시 도의회 현관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월 13일 전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 동시 개최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가 행사에 2년 연속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등 독도에 대한 도발을 노골화하는 것을 강력 규탄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날 규탄대회 인사말을 통해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한일 과거사 청산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표방하면서도, 뒤로는 자국의 영토 야욕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망언과 망동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문

충청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과거 주변 국가들에게 저지른 침략·침탈 행위와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의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라.

2014년 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김희수 행정문화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에 대한 160만 충북도민과 충청북도의회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참여자치시민연대 ·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자동차매매업 관계자,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출구 및 입구’의 도로 폭 기준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충청북도 교통물류과는 공청회 진행에 앞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기준의 변천 경위와 타시도 등록기준 등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 나선 충북개발연구원 오상진 연구위원은 도로의 기능상 차이와 분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도로 폭을 8m로 정할 경우 자동차 매매업의 활성화 및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12m로 정할 경우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상호 장단점이 있지만 기존등록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팀장은 “전국에서 충북만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주 외곽 지역에 대단위 매매단지가 들어설 경우 녹지훼손 등의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북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임영빈 이사장

은 “국토부 발표와 같이 1~2만평의 대단위 단지를 조성해 집적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입 및 출입로에 대해서는 타시도와 기계적 비교보다는 충북의 실정 및 소상공인 발전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자동차매매상사 박항구 대표는 “소규모 매매사업보다는 매매단지 내에 경매장 등 대단위 매매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며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매매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패널들의 토론을 지켜본 방청석에서는 ▲출구와 입구를 달리하는 매매단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줄 것 ▲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고려할 것 ▲청주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이 가능하므로 도 조례개정은 불필요 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도의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패널 및 방청석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패널 및 방청객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운영위원회

제326 · 327 임시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2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운영조례」 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중 의원)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1월 16일 실시된 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의회사무처장은 △제9대 의회 마무리 및 제10대 의회개원에 따른 철저한 준비 △알찬 회기운영과 현장·상시의회 구현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 △의원 자치입법 체계적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쾌적한 의정환경 조성 및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이행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안 과제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만화 제작과 권역별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정책 진단 및 분석,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인터넷 의정방송시스템 확대 운영, 본회의장 환경정비, 도의회 청사건립 준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9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제10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의정 주요현안이나 이슈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해 주민 참여 토론회 개최 등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고난 후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차질없이 의정 운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역량 강화 지원, 새로운 정책발굴 등 기능을 중심으로 꼼꼼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새 정부 들어 참여와 소통, 그리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동 활용이 강조되고 지방정치에 있어서도 의정활동의 공개·참여 요구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회의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중계방송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 추진 요구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11개 기관 및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1월 20일에는 기획관리실과 여성정책관실, 보건의복지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 △지난 2011년 교육청에서 이관된 평생교육업무의 활성화 방안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정책 추진 △여성정책 연구수요 증가에 따른 여성발전센터 연구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1월 21일 충북도립대학 등 직속기관과 출연기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환경 개선 및 과다한 부설연구기관의 업무 개편 △도립대학의 취업률 제고 대책 추진 △정부의 행복생활권 지정 등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한 연구과제 발굴을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2일에는 지식산업진흥원과 청주·충

주의료원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정부 3.0 정책에 따른 도내 기업에 대한 정보 지원체계 확립 △의료원의 진료공백 예방 및 경영수지 개선 △청주·청원권에 치중되어 있는 이용 환자 분포의 도내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1인 창조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한편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했다.

위원들은 심사에서 현행 공무원제안과 도민제안으로 구분되어 있는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안 제출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제안 심사시 도민평가제 도입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주적 운영방식의 도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1월 20일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26·327 임시회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2월 18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의결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김희수 위원장은 “최근 승레문 부실 복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사와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조사반을 선정해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심기보 의원은 “출향단체 지원과 관련해 올 9월경에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와 연계해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하는데 각 단체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형근 의원은 “통합 청주시 예산편성 계획과 관련해 청주시·청원군의 당초예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통합시의회 개원 즉시 통합시에 필요한 수정·보완된 추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는 등 통합시의 관점에서 예산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현 의원은 “주민자체센터에서 운영하는 센터

별 프로그램을 도 홈페이지에 통합제공 하는 것과 관련해 도민들이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김봉희 의원은 “충북 12개 시·군 중 체육관이 없는 곳은 증평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증평의 대표적 숙원 사업인 체육관이 빨리 건립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지숙 의원은 “최근 AI 발생에 따른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보도해 AI와 관계가 없는 가금류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월 18일 원포인트 의회로 실시한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군의회의원 의원 정수 131명과 47개소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의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했다.

협동조합 건전한 육성 위한 조례 제정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1월 17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각각 마련했다.

또한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충청북도의 재산 또는 시설과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지원, 협동조합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향후 협동조합 지원

에 대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사람이 찾는 시장'으로서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보은 지역과 같이 낙후된 지역에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20일에는 농정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최근 철새들에 의한 AI 확산으로 도내 닭·오리 농장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농정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으로 이원화된 홍보활동을 하나로 통일하여 유기농엑스포의 성공은 물론 충청도가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주문하고 갑오년 새해를 맞아 충청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했다.



1월 20일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대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26·327 임시회

‘도로명 주소’ 주민 불편 최소화 주문



1월 21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균형건설국 업무보고에서 ‘도로명 주소사용’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과 혼선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염화칼슘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지방도에 인도가 없고 선형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으므로 지방도 보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여부는 정주여건 조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교육환경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시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충북 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경우 미 분양

된 잔여 부지는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지분양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주문했다.

바이오환경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오송에 국책·연구기관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과 노후 수도관 교체 예산을 누수율이 높은 시·군에 중점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엑스포가 참여 인원 확보와 관람의 목적보다는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 수출 증대로 연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낭비요소가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인원수에 연연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산악·화학전문 의용소방대’의 창립 목적에 맞게 차별화·특수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예산을 지원하고 신설되는 지역의 소방서에 인원·장비보강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근로자 채용·관리 조례 제정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전체 구성원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감이 각급 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

한 관리계획을 시행하며 근로자 정원 및 직종별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단, 이 조례에 기간제 교원과 산학겸임교사와 강사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어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건의문에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1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326 · 327 임시회

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점검



1월 24일 간담회를 열고 균형개발국장 등 집행부로부터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완백)는 1월 24일 충청북도의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현황,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인 제천시 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 보은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옥천군 제2의료기기 단지 내 기반구축 사업, 영동군 국악체험촌 건립·와인제조 설비 지원, 증평군 홍삼포크 판매장 건립과 태양광 가로등 설치,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 단양군 오곡백과테마 영농단지조성·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대응 대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소외되고 위임 법령인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쉽게 시행되는 문제점과 충청권, 비수도권, 민간단체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 수

도권 규제완화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우리도의 대책을 청취했다.

또 과학벨트 기능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기능지구 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 하는 등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시·군별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주문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업 추진 방향도 이러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설정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벨트 정책수립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식시스템 마련, 국가 기본계획에 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등의 성과를 격려하고 현재 진행 중인 균형발전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광특 지역개발 계정 사업비의 5% 이상 추진하고 있는 광특 균형발전 사업을 15%까지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통합 청주시 막바지 추진 실태 확인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1월 23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을 청취하는 등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막바지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통합 청주시 설치법 제정·공포 후 추진해 온 통합시 출범 준비 연구용역 실시, 통합 청주시 4개구 획정 및 명칭 선정, 시·구청사 위치 선정,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임시청사 확보, 자치법규 정비,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민간단체 자율 통합, 통합시 초·중학교 학구 조정 등의 성과를 보고를 받았다.

또한 통합시 원년인 2014년 추진계획으로 화합과 안정을 위한 통합시 행정체계 마련, 자치법규 제정, 통합 청주시의회 개원, 통합시 예산편성, 통합시 금고 지정, 통합시 축하 분위기 조성 및 출범 홍보, 주민 대통합 상생협약 이행, 사무재산 인계인수 및 공유재산 승계관리, 통합시 지역교육청 직제 개편, 공부 정리 및 각종 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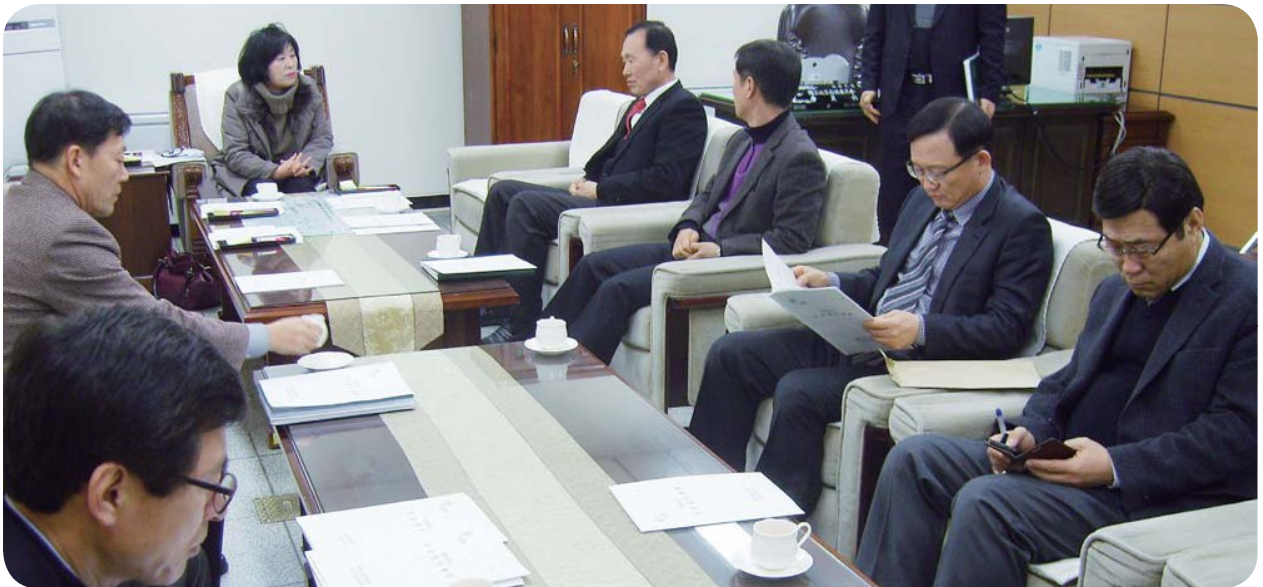
정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어 본청 청사 건립의 출발점인 안행부·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청사 건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협조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병학 의원은 청원군·청주시 교육 여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 청주시에서 교육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을 당부했다.

김도경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개인의 주소지 등 행정적 변경 사항 미흡으로 인해 주민에게 재산 손실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최미애 위원장은 “본청 청사 건립 사업비가 안행부·기재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그간의 통합사례를 바탕으로 통합에 문제점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통합 청주시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월 23일 간담회를 열고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으로부터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제326 · 327회 임시회

[제326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2013. 1. 27.시행)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제안 활성화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와 소통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한편 제안의 실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주요내용]

- 제안의 종류를 아이디어 제안, 공모제안, 실시제안으로 구분
- 제안 제출 대상자를 도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의무화 규정 마련 등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도경 의원)

[제안이유]

-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등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
-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수정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우리 도의 포도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와인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와인연구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신설
 - 기능 : 고품질 와인 연구, 제조기술 개발·보급, 와인제조 기술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4학년도 학교 신설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지 및 위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 신설(6개 학교)
- 학교 폐지(7개 학교)
- 학교 위치 변경(3개 학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회의 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규정을 신설함
-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신설함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안자 : 교육위원장)

[제안이유]

- 2014년부터 충북도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군 등 6개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치단체 간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의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분안정을 통한 고용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근로자의 채용 등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함
- 적용범위를 규정함
- 근로자의 정원 책정 및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등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 연령 등을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하여 반영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3건)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문 정비에 필요한 조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령 조항 및 명칭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일괄 개정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경제부지사 자격기준 중 근무상한연령 삭제
 - 부적격자 기준 중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무상한연령 초과자' 삭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유재산 교환차금 납부조항 신설
- 대부료 이자율 신설
-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40조) 중 제8호 삭제
-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연4%) 신설 등

[제327회 임시회]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고,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등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의원 지역선거구를 재획정

[주요내용]

- 시·군의회 의원 정수 : 131명(현행과 같음)
- 시·군의원 지역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별표 2)
 - 읍면동 명칭변경 : 6개 지역선거구 8개 읍면동
 - 도의원지역구 변경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 조정
- 청주시 '우암동'을 '가' → '나' 선거구
- 영동군 '학산면'을 '가' → '나' 선거구
 - 증평군 '가' 선거구 → 2개로 분할('가', '나' 선거구)
 - ※ 기존 '나' → '다' 선거구
 - 영동군 '용화면'을 '다' → '나' 선거구
- ※ 타 지역선거구는 변동사항 없음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는 AI 발생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와 슬픔을 같이하고, AI 사태의 조기 종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함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직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위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회 운영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내용]

-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범위를 조정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제안자 :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에 대하여 도민의 개탄과 분노를 모아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독도문제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몰역사적인 인식과 행태에 대하여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결의함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진천·음성군 혁신도시내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상업·공공청사·공원용지 등이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하여 진천군과 음성군이 입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고 양 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 변경 요청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
- ※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5분 자유발언

제327회 임시회

교육의 정치 중립을 기대한다

교육감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정치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20일 음주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는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워크숍을 빙자한 '술판'까지 벌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최근 새누리당 청주 상당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를 겸한 환경정화운동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즐겨하는 출정식을 겸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충북도내 학부모 축하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이 일부 교사가 정당에 가입해 소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번 이기용 교육감의 특정 정당 참여와 정치행보는 '치외법권'적이며 이율배반적이며 분명한 잘못을 방조하

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의 처신은 교육감직을 자신의 권력 창출에 철저히 이용하는 것인데, 그동안 법으로도 막아왔던 교육의 정치 중립 기대를 정치바람으로 흔탁하게 하고 교육계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솔직담백하게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하시는 만큼 마무리도 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미애 의원

농업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

농민들의 소득 기반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농민들의 외침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되었고 이 가격은 향후 5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새로 책정된 쌀 목표가격 18만 8,000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말에 농약·농자재 외상값을 갚지 못하고 농협의 대출금도 갚지 못한 채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농민들의 숫자가 그 어느 해보다도 증가했지만 국회는 다시 한 번 농민들의 가슴에 18만 8,000원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11년 23.6%인데 이 중에서 쌀을 제외하면 3.4%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를 넘었던 쌀 자급률은 현재 80% 수준으로 떨어졌고, 쌀 시장의 완전 개방은 쌀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의 동반급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

과 농촌 그리고 농업은 이미 백척간두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도 단위 사업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과 농업의 희생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하며 국회에서 논의와 고민이 확대되고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입법화를 촉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도경 의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최근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축산농가의 ‘보상금·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책과 ‘공무원, 가금류사육농민들의 PTSD 문제’에 대해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이후로 AI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방역활동을 하였음에도 AI청정지역인 충북으로 확산되어 진천군의 경우 오리 33농가 27만 3천수, 닭 24농가에 49만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도 육체적,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이동 통제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등의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책없이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고, 보상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AI 발병 이후 진천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매몰 작업에 투입되어 일부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등 신체적 정신적 부담의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회, 경제적 피해와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AI가 발병한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AI 발병으로 인해 투입되는 공무원들과 축산농민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김종필 의원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충북일보

2014년 01월 02일 (목)
04면 특집

“성숙한 의회 위한 징검다리 놓겠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1일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할 10대 의회가 성숙한 의회 문화의 기반 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 부활 20년, 개헌 60년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향한 한걸음 여정을 시작했다”며 “대의회가 의정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우고 충북 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고민하고 숨겨진 계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초심을 잊지 않고 축적된 의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이를 통해 영종호 시대를 열어갈 충북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오는 7월 탄생할 청주시가 명실상부한 중부권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해 충북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통의 시대를 넘어 융합의 시대도 열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열망을 받들어 타 시·도의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움직임을 지지하겠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하는 상생(相生)의 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그동안 충북은 밝은 빛을 보기 위해 애썼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이제 도운(道運) 상승의 기운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을 한해 정도(定都) 이래 찾아온 최고의 기회들을 현실화하고, 도내 전역에 희망기가 울려 퍼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덧붙여 “도민 여러분도 묵은 해의 고단했던 몸가짐을 다 버리고 밝은 희망의 물살을 힘차게 헤엄쳐 가시길 바란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이자 진정한 일꾼으로 여러분의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2014년 01월 27일 (월)
05면 종합

교육보조금 제도 개선 촉구

충북도의회 건의안 가결

충북도의회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12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6개 지자체는 관련 법률과 지침을 따를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지역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막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지난해 말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된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자체수입에서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교육부와 안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타임즈

2014년 02월 19일 (수)
05면 종합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

충북도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

131명 선출 - 청주시 '가' 우암동 '나' 편입

충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됐다.

충북도의회는 18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충북 시·군 의원 경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이번 6·4지방선거의

의원 131명을 선출하게 된다.

다만 청주 가 선거구였던 우암동이 나 선거구로 편입됐다.

음성군 음성·금왕읍의 군의원 수는 현행과 같은 3명, 2명을 유지하게 됐다.

예초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음

왕읍 기초의원을 3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음성군의회와 반대무산됐다.

영동군 가 선거구였던 학산면은 나 선거구로 조정됐고 증평군의 가 선거구도 2개로 나뉘었다.

김희수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우암동, 남아·원도면, 오창읍은 선거구와 행정구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일 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忠清日報

2014년 01월 20일 (월)
04면 종합

“협동조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도의회, 육성·지원조례 추진

도내 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가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사 책무 규정과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과 물품을 임차하는 경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협동조합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규정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경(청원 2)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충청투데이

2014년 01월 07일 (화)
03A면 종합

충북도의회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충북도의회가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기보(53·민주당·충주3)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충청북도 예술인 지원 운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예술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공예술과 사적 예술을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

작품을 생산해서는 안되며 정직한 예술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특히 인종, 민족, 성, 종교 등에 따라 예술적 차별을 하지 않으며 예술 분야의 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심 의원은 “도내 예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술권’이란 개념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2014년 01월 10일 (금)
03A면 종합

충북도의회, 도교육감 비정규직 고용주체 조례 추진

정책토론회 열어 의견 수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감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주체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둘러싸고 있어 온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21일 오후

원 교육감 직고용과 고용안정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강원 등 7개 의회가 교육감 직고용을 규정한 조례를 이미 규정했고 인천과 경남, 대구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비정

규직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학교가 교섭 상대방에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어 격면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월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을 학교 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 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판결했다.

“정부, AI 방역대책 마련하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AI 방역대책 마련 촉구 결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는 13일 세종시 전통면 베아트리아파크에서 올해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2003년 이후 2·3년 주기로 AI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AI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근본대책으로 각 종가축전염병 관리를 총괄 자문하는 전문가기구 설립 및 학안 가족

화사업 조속 시행 AI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새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대책 조기 마련 닭 오리 소비 확대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우이산호충 등 유류유출사고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사고로 인근 양식어장의 피해는 물론 방제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신체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피해어민에 대한 선보상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지역구 확정 관련 조례 의결

충북도의회(의장 김광수)는 18일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6·4 지방선거 시·군의원 지역선거구 확정 관련 조례를 의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가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을 요구함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로 개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시·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확정한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등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충고차매매단지 조례 개정안

충북도의회 공청회 찬반설전

공청회서 결론없이 말싸움만 하다 끝나... 개최 취지 ‘무색’

충북도의회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가운데 열린 공청회가 말싸움만 벌이다 별다른 결론없이 끝나면서 공청회 개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도의회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봉희(원1-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신규 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전 출입로를 8m 이상 확보해야 하고, 기존 매매단지는 6m 이상이면 매매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자동차매매업계에선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난개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개정안 심사를 보류할 것인지 여부를 위해 이

찬반 양측의 상호 비방전으로 변질됐다. 박에 나선 모자 동차매매상사 박모 대표는 조례 개정안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충청자동차치사연맹의 집행부 간부가 자동차매매단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장임을 위한 반대 라디오 비난했다. 박 대표는 특정 매매단지 사장이 집행부 간부로 있는 시민단체가 조례가 개정되면 난개발과 투기가 장려된다고 예기할 수 있는나 고 지적탄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사람이 매매단지를 조성하면서 교통 체증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초래될다며 그 반대 사자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네 배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충청자동차매매조합 임원인 이사장은 난개발을 한 사람이 오히려 이비어는 난개발 문제를 풀고 나

연대가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된 일에 어떠한 관여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작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매단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고 충청자동차치사연맹연대의 반대 입장 배경에 요구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자 시민연대 사회문화발전장은 (중고차 매매 대표가 집행부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가 이뤄진다면서 적극 개입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힘쓰는 것은 시민단체의 의무라며 색안경 쓰고 보지 말아달라 고 해명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신모씨는 일이사장은 매매단지가 포화상태에 달했던 2009년 평원군에 매매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단지 조성을 부추기는 조례 개정을 찬성하고 나섰다 고 공격했다. 이처럼 논리적인 토론을 통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 조례 개정안에 반대가 있어 이나 공청회는 찬반이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18일 도의회 현관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日 역사 왜곡·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충북도의회, 사과 촉구 결의대회

충북도의회는 18일 오후 도의회 현관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전국 17개 시·도의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2008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는 2년 연속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등 독도에 대한 도발로 노골화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행태는 참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과거 참작 전경기간 동안 한국과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매일

충북도의회, 대일교류 재개 안한다

총리 신사참배·국유정치인 망언 여파

충북도의회가 중단된 대일(對日) 지방의회간 교류를 재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위안부 부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국유정치인들의 망언 등으로 국민적 대일 감정이 악화한데 따른 조치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일본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 한 아베나 시현 의회와 충북도의회와의 교류를 복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980년 충북도와 아베나

현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했던 도의회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 수위가 높아지던 2008년부터 교류를 중단했다. 2007년 도의회 대표단 15명이 아베나시현이 주최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양국 의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2012년 아베나시현 의회와 관계를 복원하지며 손을 내밀기도 했지만 도의회는 “정중히 사양했다. 김 의장은 “교류 재개를 희망하는 아베나시현 의회의 노력도 한데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태두나없는

위가 계속되는 한 교류를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충북의 대부분 지자체는 일본 도시와 정상적인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다른 지역 일부 지자체가 교류행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일본 도시와 우호교류·자매결연 등의 형태로 맺어는 8년(청원군과 기주 시), 길게는 24년(청주시와 옥천 시) 동안 교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한·중·일 3국 청소년 바둑대회를 8월 충북에서 개최한다. 내년엔 있을 고교스포츠교류 행사인 청소년 양궁대회에도 참여

충청타임즈

AI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목적

충북도의회 건의문 채택

충북도의회는 18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2011년부터 AI 살처분 보상금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예방적 살처분 비용까지 지방에서 감당해야 한다”며 “차단방역 비용, 기금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AI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로

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한일한 행태로 늘어난 복지비 지출 등으로 가혹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주책임한 처사”라며 “중앙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하고 소모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대응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축산 폐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방역 초소 운영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우선 지원 △AI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을 촉구했다.

충청타임즈

비정규직 직원 고용주 교육감으로

충북도의회 근로자 채용·관리 조례안 통과

충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주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충북

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정규직과의 노사교섭 창구는 기존 학교장에서 교육감이 된다. 조례는 교육감이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

에 관한 사항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6조는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교육감이 근로자를 채용할 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례의 적용범위에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강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산학겸임교사,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기간제 교원은



의정활동 이모저모



△ 김광수 의장이 2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참석해 「조류인플루엔자(A) 방역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채택 등 6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 김재중 의회운영위원장이 2월 2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각 시·도별 현안을 협의했다.



△ 1월 6일 김광수 의장과 임헌경 의원이 도의회를 대표해 충북 적십자사 성영웅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1월 23일 충청북도체육회 현지를 방문해 2014년도 업무 및 현황을 보고 받았다.



△ 1월 27일 김광수 의장, 노광기 의원, 사무처 간부들이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의집과 모자원 등 3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2월 18일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양계농가와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김광수 의장과 사무처 간부들이 기자단과 함께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 1월 28일 충청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인 북부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6.4 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졌나

사전투표제도 도입 ·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이 문 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지방선거와 몇가지 크게 달라진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이전 선거시 부재자 신고를 통해 부재자 투표를 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즉 5월 30일과 5월 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되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투표시간 청구권 및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게 되었다.

셋째,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었다.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정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전국 통일기호가 부여되는 다른 공직선거의 영향을 받아 특정기호를 추첨한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상과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측면에서 몇가지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앞으로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조화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제도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유권자 여러분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꽃가루와 황사로부터 꿀피부 지키기

되도록 외출삼가, 얼굴과 손발은 깨끗이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 세종지부 이지환

겨울의 모진 한파가 사라지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초봄이 되면 모든 초목이 새싹을 피우는데 이 같은 변화는 피부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부는 자연처럼 파릇파릇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추웠던 지난날을 잊고 긴장을 풀어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자외선이 강해짐에 따라 더욱 건조해진다.

꽃피는 봄 그러나 피부는 건조한 사막

피부는 겨울 추위로부터 조금이라도 몸을 보호하고자 털구멍이나 땀구멍을 막아 체온의 발산을 방지하고 있다가 봄이 되어 따뜻한 기운을 접함으로써 살결이 부풀어 오른다.

따뜻한 호흡 속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추위로 인해 수축되어 굳게 닫혀 있던 털구멍 속의 신진대사 또한 함께 활성화되고 이 때문에 피지의 분량이 늘어나면 털구멍 속에 있던 지방이 굳어져 부스럼이 되기 쉬운 것.

봄 분위기를 한껏 풍기며 흩날리는 꽃가루나 공기 중의 수분 부족으로 모래를 많이 실어 나르는 봄바람 역시 피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공기 중 바람을 통해 피부를 공격한 꽃가루나 모래바람을 즉시 씻어내지 않으면 모공 속으로 침투해 더욱 심각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며, 가벼운 피부 발진은 방치할 경우 주변 부위로 퍼지거나 증상이 심하면 눈과 입 주위가 부어오를 수 있다.

황사가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피부염 일으켜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하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 주변에 나무가 없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 때문에 봄철 꽃가루나 건조한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은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되, 반드시 외출해야 한다면 얼굴과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

꽃가루 황사는 여드름에 치명적

특히 평소에도 여드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 봄철 꽃가루나 건조한 바람, 황사 먼지 등으로 인해 더욱 건조해지고 여드름 증상이 더 크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 피는 봄날, 봄처럼 생기 있고 화사한 피부를 갖고 싶다면 평소 규칙적인 생활습관 유지와 각종 문제 유발 요인으로부터의 예방, 그리고 트러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나의 피부 나이를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최미애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6.4 지방선거 좋은 일꾼이 뽑히길 기대하며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을 것 같은데 도민들은 의원에게 생각처럼 많은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뢰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임기 내내 지역구민 만나기를 첫째로 생각하며 지역구민이 모이는 곳이면 빠짐없이 쫓아다닙니다.

물론 지역구민들도 만나야 되지만 문제는 행사장을 돌며 지역구민들과 만나는 것을 의원의 주된 임무로 아는 주민과 의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의원의 하루는 무척이나 짧고 바쁩니다. 어떤 때는 월요일과 토요일만 있었던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의정활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원의 일차적 의무는 이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늘 자신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의원은 사업집행 현장을 뺨질나게 목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 즉 주민을 만나서 꼼꼼하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제대로 계획된 것인지, 관점이 맞는지, 원래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담당자가 처리해 놓은 서류들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의원들이 이러한 일만 잘 수행해도 50점 정도는 은 먹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의원은 끊임없는 정책 제안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대해 비판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부지런함, 그리고 비전과 정책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도민들께서는 9대 의원들에게 몇 점이나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남겨놓지 않은 9대 의회!

도민들은 또 다시 대변자를 선택할 기회입니다.

도민들의 선택은 항상 옳았을까요? 도민들이 의원과 의정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지역에서 언론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나요? 주민들은 어떻게 좋은 의원을 구별할 수 있죠? 정치 혹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꾼을 구별할 수 있을지 지역발전을 위해 언론도 주민도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농민·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자

김도경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 7월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한지 어느덧 3년 9개월째 접어든다. 그동안 농민을 대변하고 어려운 농업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고민과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고 나를 자부하고 싶다.

농업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생명산업임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산업으로 인해 그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군으로 전락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동안 필자는 농사를 지으며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음은 물론 그동안 농민과 농촌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되돌아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리지역 진천과 음성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AI발생으로 가금류의 살처분 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모두 살처분할 경우 축산농가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안정 자금이나 경영안정 자금을 즉시 지원함으로써 피해농가가 바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각종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 팽창화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점차 감소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농업은 농가 1호당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농가와외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 수 있

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주장하였다.

셋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또는 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연령 제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못받아 이를 과감하게 폐지하는데 적극 찬성하였다.

당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는 귀농인의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연령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조례 개정시 연령제한을 폐지한 것은 매우 적절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농촌 인구증가는 물론 활력화를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의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의 적극 지원이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충북도가 추진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된 사업으로 향후 수혜연령을 70세로 연장하여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는데 필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전개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된 것 같다. 농업과 농촌은 늘 필자의 마음과 함께하며 앞으로 도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해본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